

Ⅲ. 일 본

□ FY 2009: 2009. 4 ~ 2010. 3

□ 출처 :

- 平成21年度予算政府案 (2008.12.)
- 平成21年度税制改正案の概要(2008. 12.)
- 平成21年度予算の説明 (2009. 1.)
- 平成21年度予算の後年度歳出・歳入への影響試算等(2009. 2.)
- 経済財政の中長期方針と10年展望(2009. 1.)
- 平成21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(2009. 1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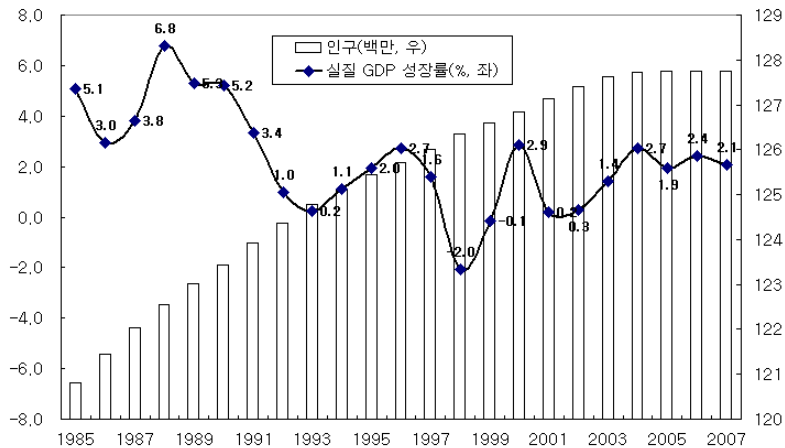
□ 환율 : 100엔 = 약 1076.63원 (약 103.34 미국달러) (2008년도 평균)

□ 경제규모(IMF기준) : 2007년 경상GDP 4조 3,816억 달러(우리나라 4.5배 수준)

□ 수출입의 대GDP 비율(명목): 2007년 기준 32.9%(우리나라 90.4%)

□ 인구: 1억 2,794만명(2008년 기준)

□ 지난 10년간의 GDP 및 인구 추이:



<요 약>

- ◇ 경제 및 재정전망 : 세계경기 동반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인해 경기 하강 국면 진입 및 저성장기조의 장기화 우려
 - 2009년 실질 성장률은 전년대비 0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
 - 경기부양을 위해 FY2008~FY2009년중 총 75조엔 규모의 경기대책 추진
 - 2009년 재정수지는 경기 악화로 인한 세입감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로 GDP 대비 -4.0%를 기록할 전망
 - 국가채무의 경우 세수확보를 위한 신규 국채발행의 증가로 인해 국채 의존도가 GDP 대비 37.6%를 기록할 전망이며 국채잔고는 세계 최악 수준

- ◇ 예산기조 및 예산안 주요내용 : 경제 불황에 따른 「국민생활과 일본경제 수호」라는 관점에서 「단기적 경기대책」, 「중기적 재정재건」, 「중장기적 개혁에 의한 성장」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7가지 정책기조를 제시
 - ① 지속적인 경기대책 추진 ② 국민생활 보호 ③ 경제수호 및 미래성장력 강화
 - ④ 예산배분의 중점화 ⑤ 「중기 프로그램」의 책정 ⑥ 세출개혁의 지속적 추진
 - ⑦ 철저한 예산 효율화

- ◇ 세입 및 주요분야별 예산
 - 조세 및 인지도입은 전년대비 14.3% 감소하였으나 세출의 경우 6.6% 증가
 - 국채발행액은 전년대비 31.3% 증가한 33.3조엔 규모
 - 세출예산 중 사회보장관계비는 전년대비 14%로 급증하여 24.8조엔 규모이며 신속적 경기대응을 위해 1조엔 규모의 경제긴급대응 예비비 운영

- ◇ 경제위기 대응정책 : 2008년중 3단계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1~2차 추경예산 및 FY2009년도 예산안 편성, 세제개정 등을 실시

- 1차 경기부양책(2008. 8.29): 국민생활 불안 해소 및 성장력 강화 등의 내용으로 총 11.5조엔 규모의 「안심실현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」을 발표
- 1차 추경예산안(2008. 9.29): 1차 경기부양책 이행을 위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 감세를 포함하는 1.8조엔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
- 2차 경기부양책(2008. 8.29): 서민생활, 금융 및 경제안정화 등을 골자로 총 26.9조엔 규모의 「생활대책」을 발표
- 세계개편안(2008.12.19): 소비지출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역점을 둔 대규모 세계개편안을 발표
- 3차 경기부양책(2008.12.19): 서민생활, 금융 및 경제안정화 등을 골자로 총 37조엔 규모의 「생활방위를 위한 긴급대책」을 발표
- 2차 추경예산안(2008. 12.19): 1~2차 경기부양책 이행을 위한 경비 충당 및 의무적 경비 등을 감안하여 4.7조엔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
- 공적자금 투입(2009. 1.27): 기술력 및 성장성이 높은 민간기업 구제를 위하여 1.5조엔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
- 정액급부금 지급(2009. 3. 5): 2차 경기부양책인 「생활대책」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1.2만엔의 정액급부금 지급을 결정

1. 경제 및 재정전망

가. 경제전망

- 2009년 일본 경제는 세계경기 동반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의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경기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후 저성장기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
 - 추가하락 및 엔고현상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
 - 주가는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10월 이후 1년 전에 비해 무려 50% 이상 하락하였고, 환율도 8월 100엔 후반대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90엔대로 떨어져 엔화 강세가 급격히 진행
 - 이에 따른 설비투자는 2008년의 경우 전년대비 -4.7%를 기록하였고 2009년 -4.2%로 전망되어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
 - 반면 물가의 경우 원유가격의 급속한 하락 및 원자재 가격에 대하여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물가를 포함한 모든 물가지표는 2009년중 안정될 전망
 - 이에 따라 2008년도 실질성장률은 -0.8% 정도(명목성장률은 -1.3%)로 추정되며, 2009년 일본 경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전년보다 부진한 0%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
- 일본정부는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하여 FY2008년~FY2009년중 대략 75조엔 규모의 3단계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추진중
 - 아사오 내각은 2008년중 8월 「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」(11.5조엔), 10월 「생활대책」(27조엔), 12월 「생활방위를 위한 긴급대책」(37조엔)의 3단계 경기대응책을 마련
 - 3단계 경기대책 이행을 위해 1~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2009년 세제개정을

추진하고 더불어 경기대응 위주의 FY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

- 정책당국은 경기대응 중심 정책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교역조건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동시에 2009년도 후반에는 민간수요의 회복 등으로 경기침체를 탈출할 것으로 기대

<표 III-1> 일본경제 동향 및 전망

(단위 : 전년대비, %)

구 분	실적	추정	전망
	2007	2008	2009
국내총생산	1.9	-0.8	0.0
민간최종소비지출	0.9	0.2	0.4
민간주택투자	-13.0	-4.1	4.7
민간설비투자	2.3	-4.7	-4.2
정부지출	0.7	-0.5	2.5
수출	9.3	-0.2	-3.2
수입	1.8	-1.5	-1.5
국내 수요기여도	0.7	-1.0	0.3
민간	0.5	-0.9	-0.3
공공	0.2	-0.1	0.6
해외 수요기여도	1.3	0.2	-0.3
노동 및 고용			
취업자수	0.4	-1.0	-0.8
고용자수	0.7	-0.2	-0.4
실업률	3.8	4.2	4.7
생산			
광공업생산지수	2.6	-5.5	-4.8
물가			
생산자물가지수	2.3	4.1	-2.1
소비자물가지수	0.4	1.3	-0.4
GDP 디플레이터	-0.9	-0.5	0.1
환율(엔/달러)	114.2	101.7	96.9
원유수입가격(달러/배럴)	78.5	94.3	58.4

자료: 내각부, 「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」, 2009. 1.

- 2010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 여부를 고려한 중장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실질성장률은 0.2~2.3%를 기록할 전망
 - 2010년 경제가 순조 및 급회복될 경우 2011년 이후 실질성장률은 평균적으로 1.4~2.3%를 보여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전망
 - 반면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실질성장률은 평균 0.6%를 기록할 전망

<표 III-2> 시나리오별 중장기 경제전망

(단위: ()안은 조엔, 이외 %)

경제 상황	구 분	추정	전망				
		2008	2009	2010	2011	2015	2018
순조 회복	국내총생산						
	명목 GDP	(509.4)	(510.2)	(519.4)	(530.8)	(586.7)	(639.9)
	명목성장률	-1.3	0.1	1.8	2.2	3.0	2.9
	실질성장률	-0.8	0.0	1.5	1.4	1.5	1.2
	물가상승률						
	소비자물가	1.3	-0.4	0.2	1.4	2.5	2.3
	생산자물가	4.1	-2.1	-1.6	-0.1	1.9	1.5
	GDP deflator	-0.5	0.1	0.3	0.7	1.5	1.7
	완전실업률	4.2	4.7	4.6	4.5	4.0	3.3
	명목장기금리	1.5	1.1	1.4	1.7	3.0	4.1
	부문별 수지						
	일반정부	-5.8	-6.9	-6.0	-5.1	-3.2	-2.6
	민간	9.3	10.5	9.5	9.1	8.7	8.2
해외	-3.5	-3.6	-3.5	-4.0	-5.5	-5.6	
급회복	국내총생산						
	명목 GDP	(509.4)	(510.2)	(526.0)	(544.2)	(630.8)	(705.2)
	명목성장률	-1.3	0.1	3.1	3.5	4.2	3.8
	실질성장률	-0.8	0.0	2.6	2.3	2.3	1.8
	물가상승률						
	소비자물가	1.3	-0.4	0.3	1.8	2.8	2.5
	생산자물가	4.1	-2.1	-1.5	0.1	2.3	1.8
	GDP deflator	-0.5	0.1	0.5	1.2	1.9	1.9
	완전실업률	4.2	4.7	4.6	4.4	3.2	2.3
	명목장기금리	1.5	1.1	1.6	2.3	4.2	5.3
	부문별 수지						
	일반정부	-5.8	-6.9	-5.7	-4.5	-1.6	-0.5
	민간	9.3	10.5	9.3	8.5	6.7	5.3
해외	-3.5	-3.6	-3.6	-4.0	-5.1	-4.8	
침체 계속	국내총생산						
	명목 GDP	(509.4)	(504.5)	(502.5)	(499.2)	(502.4)	(520.8)
	명목성장률	-1.3	-1.0	-0.4	-0.6	1.2	1.3
	실질성장률	-0.8	-0.8	-0.1	0.2	1.1	0.6
	물가상승률						
	소비자물가	1.3	-0.6	-0.3	-0.4	0.8	1.3
	생산자물가	4.1	-2.5	-1.9	-1.7	0.1	0.4
	GDP deflator	-0.5	-0.2	-0.3	-0.8	0.1	0.7
	완전실업률	4.2	4.7	4.8	4.9	5.4	4.9
	명목장기금리	1.5	1.0	1.3	1.3	1.8	2.0
	부문별 수지						
	일반정부	-5.8	-7.2	-6.8	-6.9	-7.3	-7.2
	민간	9.3	10.8	10.3	10.2	10.3	9.3
해외	-3.5	-3.5	-3.4	-3.3	-3.0	-2.2	

자료: 내각부, 「經濟財政の中長期方針と10年展望」, 經濟財政諮問會議, 2009. 1.

나. 재정전망

- 2009년 재정여건은 세계경제 침체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인해 악화될 전망
 - 재정수지는 경기 악화로 인한 세입감소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전년 대비 -1.4%p 상승하여 GDP 대비 -4.0%를 기록할 전망
 - 기초재정수지의 경우 「기본방침 2006」에 따른 세출개혁 등의 노력으로 2002년도 GDP 대비 -5.7%의 높은 수준에서 2008년도 -1.9%로 개선되었으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다시 악화될 전망
 - 국가채무는 2009년중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확보를 위한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
 - 국채 신규발행액은 2008년의 경우 하반기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전년 대비 30.7% 증가한 33.2조원으로 추정되며, 2009년에도 이러한 증가세로 인해 국채 의존도¹⁾가 GDP 대비 37.6%를 기록할 전망
 - 이로 인해 2009년 국채잔고도 전년 대비 1.1%p 증가한 174.1% 수준(GDP대비)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최악의 수준으로 장래에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

<표 III-3> 주요 재정지표 추이

(단위: ()안은 조엔, 이외 GDP대비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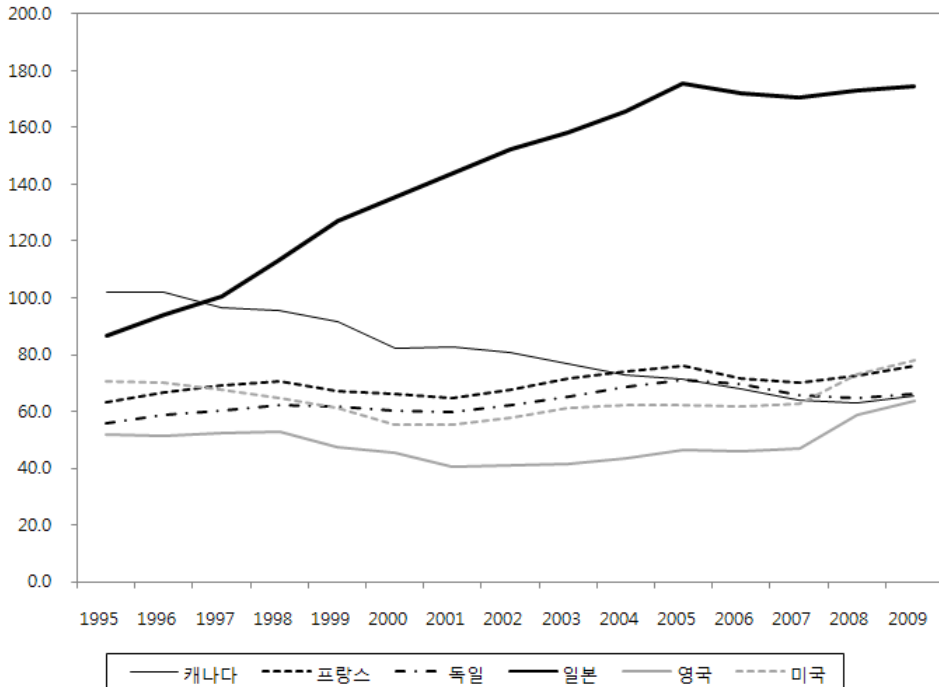
구분	실적		추정	전망
	2006	2007	2008	2009
재정수지	-3.2	-2.9	-2.8	-3.8
(사회보장기여금 제외)	-3.2	-2.8	-2.6	-4.0
기초재정수지	-3.0	-2.4	-1.9	-2.1
국채 신규발행액	(30.0)	(25.4)	(33.2)	(33.3)
국채 의존도	37.6	30.7	37.3	37.6
국채잔고	171.9	170.6	173.0	174.1
순국채잔고	84.6	85.9	87.8	90.1

자료: (기초)재정수지는 Economic Outlook(84호), OECD(2008.12.), 이외는 재무성(2008.12)

1) 국가채무 의존도 = 국채발행액/총 재정지출

[그림 III-1] 국가별 국채잔고 추이

(단위: GDP 대비 %)



자료: Economic Outlook(84호), OECD, 2008.12.

- 2009년도 예산이 이후 연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결과 2009년의 경기 침체 본격화에 따른 재정악화 영향으로 인해 이후 재정수지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여 2011년 이후 7.7%를 기록할 전망
 - 이후 재정수지 적자폭 증가는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에 따라 세수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로 국채비율이 누적되는 효과에 기인

- 2010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 여부를 고려한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재정수지 및 국채잔고는 GDP 대비 각각 -2.0~-7.0%, 131~201%를 기록할 전망
 - 기초재정수지의 흑자화 달성 시점은 순조회복의 경우 2018년(0.1%), 급회복의 경우 2015년(0.9%)으로 예상되나 침체가 계속될 경우 -4.0% 수준을 유지할 전망

- 국채잔고는 2010년 경제가 급회복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상 유지 및 악화가 예상되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

<표 III-4> FY2009년도 예산의 후년도 영향 시산

(단위: 조엔, 전년대비 %)

구 분		추정	전망			
		2008	2009	2010	2011	2012
세입	조세 및 인지수입	53.6	46.1	46.5	47.7	49.1
	기타 수입	4.2	9.2	8.2	4.8	4.7
	계	57.7	55.3	54.8	52.4	53.8
세출	국채비	20.2	20.2	21.9	23.5	25.3
	지방교부세부금 등	15.6	16.6	17.0	16.6	16.7
	일반세출	47.3	51.7	52.1	52.8	53.4
	사회보장관계비	21.8	24.8	25.7	26.6	27.5
	공공사업관계비	6.7	7.1	7.0	7.0	6.9
	기타	18.8	19.8	19.4	19.3	19.1
	계	83.1	88.5	91.1	93.0	95.4
재정수지		-25.4	-33.2	-36.3	-40.6	-41.6
명목 GDP		509.4	510.2	515.8	526.6	538.2
세입(GDP 대비)		11.3	10.8	10.6	10.0	10.0
세출(GDP 대비)		16.3	17.3	17.7	17.7	17.7
재정수지(GDP 대비)		-5.0	-6.5	-7.0	-7.7	-7.7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1年度予算の後年度歳出・歳入への影響試算」2009. 1.

<표 III-5> 시나리오별 중장기 재정전망

(단위: 조엔, ()안은 GDP대비 %)

경제 상황	구 분	추정	전망				
		2008	2009	2010	2011	2015	2018
순조 회복	재정수지	-26.8 (-5.3)	-32.5 (-6.4)	-30.8 (-5.9)	-26.6 (-5.0)	-21.0 (-3.6)	-23.1 (-3.6)
	기초재정수지	-17.2 (-3.4)	-21.6 (-4.2)	-19.9 (-3.8)	-15.2 (-2.9)	-4.9 (-0.8)	0.8 (0.1)
	국채잔고	749.3 (147.1)	767.4 (150.4)	791.6 (152.4)	815.7 (153.7)	898.9 (153.2)	962.2 (150.4)
급회복	재정수지	-26.8 (-5.3)	-32.5 (-6.4)	-29.7 (-5.6)	-24.5 (-4.5)	-14.7 (-2.3)	-14.4 (-2.0)
	기초재정수지	-17.2 (-3.4)	-21.6 (-4.2)	-18.6 (-3.5)	-12.6 (-2.3)	5.5 (0.9)	15.6 (2.2)
	국채잔고	749.3 (147.1)	767.4 (150.4)	790.6 (150.3)	813.1 (149.4)	881.4 (139.7)	924.6 (131.1)
침체 계속	재정수지	-26.8 (-5.3)	-33.4 (-6.6)	-33.0 (-6.6)	-31.9 (-6.4)	-35.0 (-7.0)	-36.5 (-7.0)
	기초재정수지	-17.2 (-3.4)	-22.5 (-4.5)	-22.1 (-4.4)	-20.9 (-4.2)	-22.6 (-4.5)	-21.5 (-4.1)
	국채잔고	749.3 (147.1)	767.4 (152.1)	793.7 (158.0)	822.9 (164.8)	948.6 (188.8)	1049.1 (201.4)

자료: 내각부, 「經濟財政の中長期方針と10年展望」, 經濟財政諮問會議, 2009. 1.

- 일본정부는 세계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「지속가능한 재정」 달성을 위한 재정개혁 추진
 - 단기적으로는 국민생활 보호와 동시에 3년 이내의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경기대책 실시
 - 중장기적으로는 「기본방침 2006」에 의한 세출개혁 및 「중기 프로그램」을 통한 세입개혁을 지속적으로 단행함으로써 2010년 중반까지 국가채무비율의 안정적 인하 및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목표²⁾
 - 이와 연계하여 2009년 예산편성 시 「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8」을 수립하고

동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

<참고> 「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8」 주요내용

세계의 다이내미즘(dynamism)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경기 회복 조기화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재정개혁 시행

- 성장력의 강화
 - 3개의 전략(전원참가 경제전략, 글로벌전략, 혁신적 기술창조전략) 추진
 - 「지방재생전략」에 근거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수행
 - 부가가치 및 식료자급율의 향상 등을 위한 농림수산업 강화
 - 타업종간 또는 대기업과의 연계에 의한 중소기업의 저력 발휘
- 저탄소사회의 구축
 - 교토의정서 이행 시점 도래 및 지구 온난화 문제 대처와 관련하여 일본의 「환경력」을 발휘하고 적극적 외교를 통한 대처를 통해 저탄소사회 구축
- 국민본위의 행정재정개혁
 - 지방분권, 생활자 중시 행정, 예산낭비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「기본방침 2006」, 「기본방침 2007」과 연계하여 자산 및 채무개혁 실시
- 사회보장제도 정비 및 양질의 국민생활 구축을 위한 안심사회 실현
 - 저출산·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향상
 - 교육·치안·에너지·식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

2) 「기본방침 2006」의 주요내용은 ① FY2011년까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기초재정수지 흑자화, ② 명목 경제성장률 3%를 가정하고 지출삭감(11.4조~14.3조엔) 및 세수증대(2.2조~5.1조엔) 달성이었으나,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동 목표달성 연도를 2010년대 중반까지로 재설정함

2. 예산기조 및 세부내용

가. 예산기조 및 내용

국민생활과 일본경제의 수호(To safeguard people's daily lives and the Japanese economy)라는 관점에서 「단기적 경기대책」, 「중기적 재정재건」, 「중장기적 개혁에 의한 경제성장」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

- ① 지속적인 경기대책 추진 ② 국민생활 보호
- ③ 경제수호 및 미래성장력 강화 ④ 예산배분의 중점화
- ⑤ 「중기 프로그램」 책정 ⑥ 세출개혁의 지속적 추진
- ⑦ 철저한 예산 효율화 등 7가지 세부적인 기조를 제시

1) 지속적인 경기대책 추진

- 세계 금융시장 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총 75조엔 규모의 이른바 '3단계 경기부양책'을 지속적으로 추진
 - 국민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하여 총 11.5조엔 규모의 「긴급 종합대책」를 발표하고 1.8조엔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
 - 내수확대와 성장력 강화를 위하여 총 27조엔 규모의 「생활대책」을 제시하고 4.7조엔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
 - 경기침체 장기화를 대비한 「생활방위를 위한 긴급대책」 발표와 더불어 「단기적 경기대책」 성격의 FY2009년 예산안 편성 및 세제개정을 단행(총 37조엔 규모)
 - 이와 연계하여 향후 저탄소 사회 실현, 효율적 의료서비스, IT산업 저력 발휘 등과 같은 신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인프라 정비나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추가 경기대책을 계획

2) 국민생활 보호

-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악영향에 따라 국민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에 중점을 둠
- 고용악화 우려에 따른 고용보험의 안전망 기능의 강화, 중소기업·비정규노동자의 고용유지 지원, 고용 창출을 위한 특별장려금 지급 등의 대책 마련
 - 의료대책과 관련하여 지역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출생률 감소에 따른 출산지원을 위하여 출산 및 육아일시금을 일률적으로 4만엔으로 증액
 - 또한 긴급 침수대책 및 소비자 정책의 추진과 같은 생활안전 대책을 강화

구 분	항 목	예산액 및 증감
고용대책	고용보험료 0.2% 인하	6,400억엔
	실업급여 적용범위 확대	1,700억엔
	이직자를 위한 주택 및 생활 지원	252억엔(신규)
	중소기업 등 고용유지 지원	581억엔(+570억엔)
	비정규노동자 등 지원	94억엔(+121%)
	지방교부세 증액	1조엔 (특별회계 0.5조엔)
의료대책	의료진 확보 및 구급 의료대책	428억엔(+79%)
	육아일시금 증액에 따른 출산 지원	79억엔(신규)
생활안전	방재대책 추진	2,910억엔(+13%)
	소비자행정 강화	93.3억엔(신규)

3) 경제수호 및 미래 성장력 강화

□ 지방의 저력 발휘

-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를 1조엔으로 증액
- 도로특정재원을 일반재원화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연관된 다른 인프라 정비나 소프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
- 경작포기지를 영농 가능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통하여 식료품 자급력의 향상을 모색

□ 성장잠재력 강화

- 기초연구나 최첨단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과학연구 보조금의 확충
- 대학에서의 교육·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화 및 인재활용 이수교육의 충실 등으로 활용
- 태양광 발전·축전지 등 에너지 혁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GIS(Green Investment S초든) 크레딧의 구입 추진
- 국산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등과 같은 농·상·공업간 제휴

□ 현 경제상황에 대응한 안전망 강화

- 경제금융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고용, 중소기업금융, 사회자본 정비 등에 대하여 기민하고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긴급대응 예비비 1조엔을 신설
- 기업의 금융지원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기대응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자본조달 기능 확대 및 강화

구 분	항 목	예산액 및 증감
지방 활성화	지방교부세 증액	1조엔 (특별회계 0.5조엔)
	지방 자립을 위한 교부금 창설	9,400억엔(신규)
	식료품 자급력 향상	634억엔(신규)
	지방경제 활성화 사업 후원	37.5억엔(+50%)
	개발낙후지역 통신망 정비	78.7억엔(+27%)
성장력 강화	기초 및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	2,187억엔(+2%)
	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	705억엔(+4%)
	퇴직 인재활용 지원	58억엔(+100%)
	혁신창조기구 창설	400억엔(신규)
	GIS 크레디트의 구입 촉진	433억엔(+40%)
	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지원	789억엔(+25%)
	농·상·공업간 협력 지원	242억엔(+88%)
안전망 구축	경제긴급 대응 예비비	1조엔(신규)
	중소기업 자금지원	674억엔(+34%)
	중견 및 대기업 자금지원	103억엔(+100억엔)
	금융기능강화법에 의한 정부자본 참여 확대	10조엔
	은행 등 보유 주식취득의 활용 강화	20조엔

□ 과감하고 신속적인 감세 조치

- 주택론관련 세금공제 적용을 5년까지 확대하고 세금공제 한도액을 500만엔(장기 주택의 경우는 600만엔)으로 증액
-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중량세 부담의 시한적 완화
- 중소기업인 등의 세율을 현행 22%에서 18%로 2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중소기업인 등의 결손금 발생 시 환급

- 에너지 축적이나 신에너지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우대

4) 예산배분의 중점화

- 「국민생활의 방위」, 「금융·경제의 안정 강화」, 「지방의 저력 발휘」를 내용으로 하는 ‘최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프레임워크’를 활용하여 예산배분의 중점화를 모색
 - FY2009년 예산안 편성 시 고려되는 「기본방침 2008」은 성장력 강화, 저탄소사회 구축, 사회보장 강화, 양질의 국민생활 구축 등과 같은 제반 주요시책을 담고 있음
 - 재정효율화의 측면에서 「기본방침 2008」에서 제시된 주요시책 가운데 긴급성이나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배분
- ‘최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프레임워크’는 총 3,330억원 규모로 크게 국민생활 방위, 지방저력 발휘, 교육 및 연구개발, 성장력 및 외교력 강화 4개 부문으로 구성
 - 국민생활의 방위 과제는 사회보장과 기타(소비자 정책,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) 부문으로 세분화되며 각각 775억엔과 255억엔을 배분
 - 지방저력 발휘 과제는 지역 활성화와 식료품 자급력 향상을 그 내용으로 하여 각각 675억엔과 630억엔이 할당
 - 교육 및 연구개발 과제는 주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대학교육 환경 개선 및 최첨단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골자로 총 705억엔 규모
 - 성장잠재력 및 외교력 강화 과제는 산업간 공조, 대외 교섭력 강화 및 개발도상국 지원을 내용으로 총 290억엔 규모

구 분	항 목	예산액
생활방위	사회보장 등	775억엔
	- 의사확보 및 구급의료 지원	308억엔
	- 비정규노동자 취로 지원	51억엔
	- 난치병대책 등 종합지원	220억엔
	- 장애인 지원	90억엔
	- 고령자주택 안전망	40억엔
	-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	42억엔
	- 복지 및 간호인 재확보대책 등	25억엔
	기타(소비자청, 중소기업대책 등)	255억엔
	- 소비자행정의 강화	33억엔
	- 중소기업 자금 및 거래 지원	124억엔
	- 보행자 등을 위한 안전대책	98억엔
지방저력 발휘	지방 활성화	675억엔
	- 지방 경제 활성화 지원	308억엔
	- 집중호우 및 긴급 침수대책	244억엔
	- 사회자본시설 정비	130억엔
	- 지방 공공교통 활성화	14억엔
	식료품 자급력 향상	630억엔
	- 경작지 등의 효율적 활용	423억엔
- 경작포기지 해소 지원	207억엔	
교육 및 연구개발	교육 및 연구개발	705억엔
	- 대학 등에서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	331억엔
	- 세계 최첨단 연구개발	281억엔
	- 이노베이션 촉진	16억엔
	- 지구환경관측 위성 지원	77억엔
성장잠재력 및 외교력강화	성장력 및 외교력 강화	290억엔
	- 농·상·공업간 협력 강화	112억엔
	- 외교력 강화 및 도상국 지원	119억엔
	- 산업분야 환경대책	27억엔
	- ICT 선진사업 국제화	25억엔
	- 재범방지대책 강화	6억엔
총 계		3,330억엔

5) 「중기 프로그램」의 책정

- 재정건전화 관점에서 예산배분의 중점화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며 이는 「중기 프로그램」으로 대표됨
 - 「중기 프로그램」이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구축과 그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세계경제의 혼란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3년 이내의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 안심 강화와 양질의 복지를 동시에 제공
 - 경제상황이 호전될 경우 사회보장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부가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세제발본개혁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

6) 세출개혁의 지속적 추진

- 세계 경제 및 금융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재정규율 유지 관점에서 「기본방침 2006」에 의한 세출개혁의 지속적 시행
 - 사회보장
 - 도로특정재원 재검토를 통하여 해당 재원의 일부를 삭감하여 일반재원화함으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재원 600억엔을 거출
 - 연금특별회계 자금 청산으로 인한 1,370억엔의 재원을 확보한 후 후발의약품 사용 촉진으로 230억엔을 절감
 - 반면 의료, 출산 및 양육 지원, 장기 간호를 위한 의료인 확보, 비정규직 고용대책 등의 중요과제에 대해서는 ‘최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프레임워크’를 활용
 - 공공사업
 - 특별회계 항목이었던 ‘지방도로정비 임시교부금’의 상당액이 일반회계로 편입되

면서 FY2008 당초 예산안보다 5.0% 증가

- 추가적으로 '지역활력기반창조 교부금'이 삭감되고 대신 사회보장재원에 거출되어 3.2% 감소

○ 지방재정

- 지방공공단체가 지역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를 1조엔 증액
- 「기본방침 2006」 등에 따른 세출개혁을 지속함으로써 급여관계 경비 0.1조엔 및 정원 2.6만명 삭감을 단행

○ 기타

<문교·과학기술>

- 문교 진흥비는 거의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 유지
- 과학기술 진흥비는 기초연구 지원이나 혁신 기술의 연구개발 등으로 중점화하여 1.1% 증가
- 국립대학운영비 교부금, 사학조성관계비는 1% 감소한 반면 대학지원경비 등은 확충되어 교육연구 개선에 일조

<ODA>

- 식량이나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무상자금협력 및 JICA기술협력의 증가 및 그에 따른 '최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프레임워크'에 할당되어 9년만 플러스를 나타냄(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% 감소)
- FY2009 ODA 사업량의 증가 전망에 따라 경비가 절감 노력과 동시에 엔 차관 등을 활용하여 재원 마련
- FY2008년 1조 5,700억엔에서 FY2009년 1조 8,000억엔으로 14.6% 증가

<방위>

- 미군 재편사업의 본격화에 따른 관련 경비가 증가하였으나 기존 경비 효율화를 노력을 통해 방위관계비는 전년도 대비 0.1% 감소

<공무원 인건비>

- 사회보험청 개혁관련 이행을 제외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최대 2,525명을 감축

7) 철저한 예산 효율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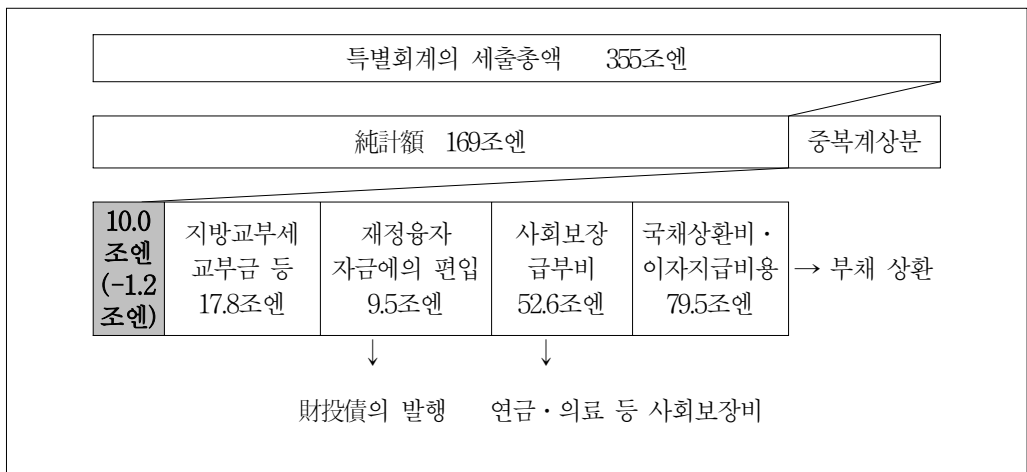
□ 기존 정책의 제고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‘최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프레 임워크’ 등의 중요 시책의 재원을 염출

○ 공익법인용 지출 등

-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 등과 같은 공익법인의 지출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FY2006년 지출실적 대비 41%인 3,928억엔을 삭감
- 법인형태 변경 등에 의한 요인을 제외하면 3,651억엔(39%) 삭감
- 보조금 등에 의해 조성한 공익법인의 기금을 조기에 재검토하여 불필요액인 654억엔을 국고로 반납

○ 특별회계 지출 등의 재검토

-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제로 베이스로 검토하여 전년대비 11%인 약 1조 2,400억엔을 삭감
- 이중 도로정비 임시교부금 폐지에 의한 것은 약 6,800억엔



- 행정비용의 절감 및 효율화
 - 레크레이션 경비를 폐지하고 홍보경비(32%), 위탁조사비(32%), 택시비(31%) 등
에 대하여 전년대비 3할 이상을 삭감하여 557억엔 절감
- 기존 정책의 재검토
 - 3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개별사업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
하여 일반회계 약 5,500억엔 및 특별회계 약 3,300억엔을 절감
- 독립행정법인용 재정지출 등
 - 독립행정법인 정리 합리화 계획의 실시 등으로 독립행정법인용 재정지출을 삭감
하여 1,377억엔을 예산에 반영
 - 독립행정법인 개혁법안 통과 시 정부출자 등의 독립행정법인의 보유자산을 사정
하여 불필요액을 국고에 납부(세입계상액: 304억엔)
- 기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예산 효율화 달성
 - 예산집행조사결과의 반영으로 324억엔 절감
 - 국회의 의결 및 회계결산검사 보고 등의 반영으로 694억엔 절감
 - 기존 수의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184억엔 절감

3. 예산수입·지출내역

□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는 전년대비 6.6% 증가한 88조 5,480억엔

<표 III-6>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·세출

(단위:10억엔, %)

구 분	추정(A)	전망(B)	(B-A)	(%)
	2008	2009	비교증감액	증감률
세입				
조세 및 인지수입	53,554	46,103	△7,451	△13.9
기타 수입	4,159.3	9,151	4,991.7	120.0
국채발행	25,348	33,294	7,946	31.3
계	83,061.3	88,548	5,486.7	6.6
세출				
국채비	20,163.2	20,243.7	80.5	0.4
지방교부세부금 등	15,613.6	16,573.3	959.7	6.1
일반세출	47,284.5	51,731.0	4,446.5	9.4
계	83,061.3	88,548	5,486.6	6.6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1年度予算の説明」, 2009. 1.

가. 예산수입 내용

□ 조세 및 인지수입

○ FY2009년도 조세수입 및 인지수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7조 6,660억엔(14.3%)

감소한 45조 8,880억엔 규모

- 그러나 FY2009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주택·토지세제, 법인관계 세제 등의 세제

- 개정에 의한 세수감소 4,350억엔을 제외하고,
- SOC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던 휘발유세를 일반회계에 산입하면 6,500억엔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세수감소 규모는 7조 4,510억엔 규모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총 세수는 46조 1,030억엔 규모로 예상
- FY2009년 조세수입 감소 전망은 최근 경기 악화에 따른 법인세, 소득세, 소비세 감소에 기인
- 세수 감소에 대한 세목별 기여는 세제개정 후 전망치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법인세(36.9%), 소비세(5.1%), 소득세(4.3%) 등
- 반면 휘발유세의 경우 사회자본정비사업 특별회계에 속해있던 부문을 2009년 세제개정으로 인해 일반회계에 편입시킴으로써 25.9% 증가

<표 III-7> 2009년도 조세 및 인지수입

(단위: 억엔, %)

세 목 (일반회계)	2007	2008	2009					
			현행유지		세제개정 고려		세제개정 후 전망	
		(당초)	증감	세입전망	증감	일반회계 편입	세입전망	증감
		(1)	(2)	(3)=(1)+(2)	(4)	(5)	(6)=(3)+(4) +(5)	(7)=(6)-(1)
원천소득세	129,285	131,480	△4,660	126,820	△ 210		126,610	△4,870
신고소득세	31,515	31,310	△2,150	29,160	△ 50		29,110	△2,220
(소득세 계)	160,800	162,790	△6,810	155,980	△ 260		155,720	△7,070
법인세	147,444	167,110	△58,430	108,680	△ 3,240		105,440	△61,670
상속세	15,026	15,500	△110	15,390	△ 170		15,220	△280
소비세	102,719	106,710	△5,410	101,300			101,300	△5,410
주 세	15,242	15,320	△1,120	14,200			14,200	△1,120
담배세	9,253	8,940	△510	8,430			8,430	△510
회발유세	21,105	20,860	△1,080	19,780		6,500	26,280	5,420
석유가스세	137	140	△10	130			130	△10
항공기연료세	880	890	△60	830			830	△60
석유석탄세	5,129	5,210	△110	5,100			5,100	△110
전원개발촉진세	3,522	3,480	30	3,510			3,510	30
자동차중량세	7,399	7,150	△10	7,140	△ 680		6,460	△690
관 세	9,410	9,390	△930	8,460			8,460	△930
톤 세	96	100	-	100			100	-
인지수입	12,021	11,950	△ 2,100	9,850			9,850	△2,100
합계	510,182	535,540	△76,660	458,880	△ 4,350	6,500	461,030	△74,510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1年度租税及び印紙收入予算の説明」, 2009. 1.

□ 국채발행액

- FY 2009년 국채발행액은 경기 둔화로 인해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원 소요가 급증하여 전년대비 31.3% 증가한 33조 2,940억엔 규모
- 국채의존도는 2003년 GDP 대비 42.9%를 보이다가 「기본방침 2006」에 의한 세출개혁의 노력으로 2007년 31.0%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37.6%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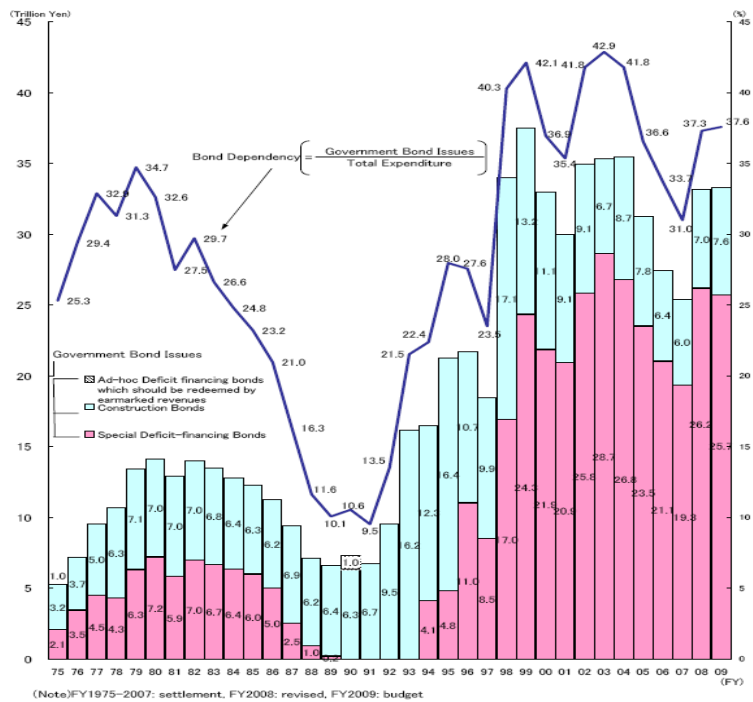
<표 III-8> 2009년도 국채발행액

(단위: 억엔)

08년도 당초(A)	08년도 보정 후	09년도 예산안(B)	증감액(B-A)
253,480	331,680	332,940	79,460 (31.3%)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1年度予算政府案」, 2009. 12.

[그림 III-2] 국채 신규발행 및 의존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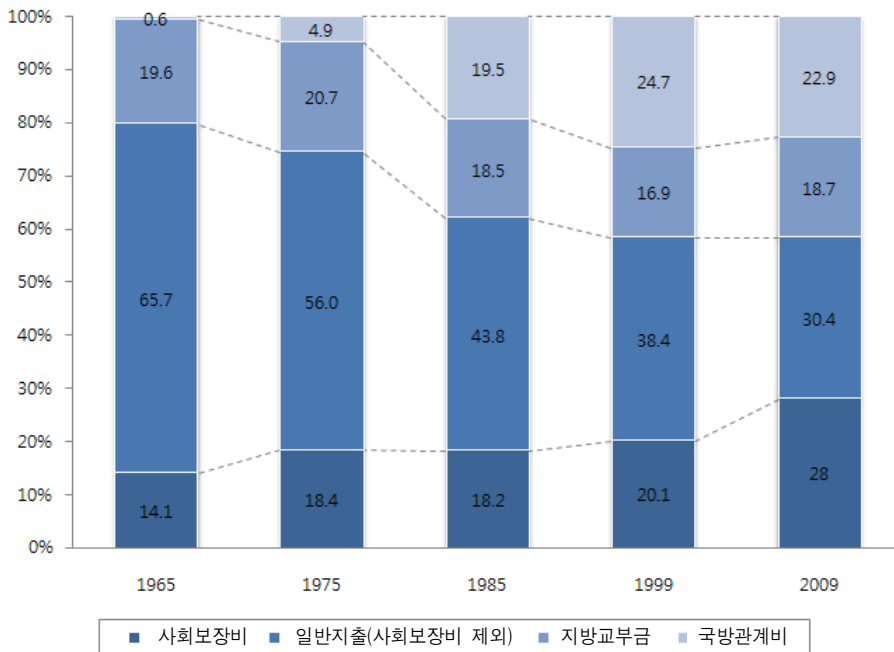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1年度予算政府案」, 2009. 12.

나. 예산지출 내용

- 일반세출 구성내역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보장관련비와 국방관계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지출(사회보장비 제외)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

[그림 III-7]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내역 변화 추이

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1年度予算政府案」, 2009. 12.

- FY2009년 일반세출은 51조 7,310억엔으로 전년대비 9.4% 증가
 - 사회보장관련비는 세출내역중 규모가 가장 크며 경기대응책 실시로 인해 전년대비 14%로 크게 증가한 24.8조엔 규모
 - 특히 사회보장비 중 2,200억엔에 대해서는 지역활력기반창조교부금(가칭)의 삭감에 의한 재원거출(600억엔), 연금특별회계에 의한 자금 청산(1,370억엔), 후발 의약품 사용 촉진(230억엔)으로 마련

- 추가적으로 의료진 확보, 구급의료대책, 출산·양육지원, 비정규직 고용 등과 같은 중요과제에 대해서는 ‘최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프레임워크’를 활용
- 공공사업관계비는 전년대비 5% 증가한 7조엔 규모
 - 동 예산의 증가는 특별회계에 산입되었던 임시교부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된 것에 기인하며 이러한 요인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5.2% 감소
 - 도로특정재원을 일반회계재원으로 활용하여 사회보장재원에 거출하여 국민생활 보호, 지역 활성화, 성장력 강화와 같은 과제에 배분을 중점화
- 지방재정관계비는 전년대비 6.1% 증가한 16.6조엔 규모
 - 경기대응책의 일환으로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역에서의 안전 확보 및 지역경제 부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를 1조엔(특별회계 0.5조엔) 증액
- 문교관계비는 20억엔 정도 감소하여 전년 수준을 유지
- 과학기술관계비는 기초연구 및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어 전년대비 1.1% 증가한 1.4조엔 규모
- 방위관계비는 미군재편사업의 본격화에 따른 경비 합리화 및 효율화 노력으로 전년대비 60조엔 절감
- ODA(정부개발원조) 관계비는 무상자금협력, JICA 기술협력 등으로 인해 그 규모가 2000년에 비해 1.3%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량은 전년대비 14% 증가 전망
- 농림수산관계비는 경기부양책관련과 관련한 공공사업 추진, 경작지 유효 활용, 지역 활성화 등과 연계하여 중점적인 배분 실시
- 중소기업관계비도 경기부양과 관련하여 지역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금융기반 강화, 농·상·공 협력 등에 중점 배분
- 에너지관계비는 「기본방침 2006」에 의한 세출개혁의 방침을 근거로 특별회계 세출충액을 억제함으로써 예산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실현
- 경제긴급대응 예비비는 경기침체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1조엔 규모로 운영

<표 III-9> 2009년도 일반회계 주요분야별 세출예산

(단위:10억엔, %)

구 분	추정(A)	전망(B)	(B-A)	(%)
	2008	2009	비교증감액	증감률
국채비	20,163	20,244	81	0.4
지방교부세교부금	15,140	16,111	971	6.4
지방특례교부금	474	462	△12	△2.4
사회보장비				
연금/의료/개호보험급부비	16,681	19,600	2,920	17.5
생활자보장비	2,005	2,097	92	4.6
사회복지비	2,490	2,509	19	0.8
보건위생대책비	410	435	24	5.9
고용노동자재해보험대책비	196	193	△3	△1.3
계	21,783	24,834	3,052	14.0
문교 및 과학진흥비				
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	1,680	1,648	△31	△1.9
과학기술진흥비	1,363	1,378	15	1.1
문교시설비	116	116	0	0.0
교육진흥조성비	2,004	2,020	16	0.8
육영사업비	150	149	△1	△0.7
계	5,312	5,310	△2	△0.0
연금관계비				
문관 등	29	27	△1	△6.6
군인유족 등	776	718	△58	△7.5
연금지급 사무비	2.9	2.7	△0.2	△6.4
유족 및 부재가족 등	45	39	△5	△11.4
계	852	787	△65	△7.6
방위관계비	4,780	4,774	△6	△0.1
공공사업관계비				
치산치수대책사업	939	928	△11	△1.1
도로정비사업	1,484	1,222	△262	△17.6
항만/공항/철도정비사업	497	474	△22	△4.4
주택도시지역 환경정비사업	1,610	2,417	806	50.1
상하수도/폐기물처리시설정비	927	880	△47	△5.1
농업농촌정비사업	668	577	△91	△13.6
임수산업기반정리사업	297	282	△15	△5.1
조정비 등	243	218	△25	△10.3
소계	6,663	6,997	334	5.0
재해복구 등 사업	73	73	0	0.0
계	6,735	7,070	334	5.0
경제협력비	666	630	△36	△5.5
중소기업대책비	176	189	13	7.3
에너지대책비	866	856	△10	△1.1
식료안정공급관계비	858	866	8	0.9
기타 경비	4,907	5,064	157	3.2
경제긴급대응 예비비	-	1,000	1,000	-
예비비	350	350	0	0.0
합계	83,061	88,548	5,487	6.6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1年度予算の説明」, 2009. 1.

4. 경제위기 대응정책

가. 2008년

1) 1차 경기대책 「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」 발표(2008. 8.29)

-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 불황 타개를 위하여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총 11.5조엔 규모(재정지출 1.8조엔, 재정투융자 0.2조엔 제외)의 동 대책을 발표
 - 국민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,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변혁 가속, 성장력 강화라는 3가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가지 주요시책 제시

<표 III- 10> 「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」 주요내용

(단위: 조엔)

목표	주요내용	재정지출	사업규모
국민생활 불안해소	1. 생활·고용지원	0.4	0.4
	- 물가 종합대책 (수입곡물의 정부판매가격 상승폭 억제, 고속도로 요금인하 등)		
	- 소비자정책 강화(소비자청 창설 등)		
	- 비정규직 고용대책 추진 (장애인, 여성 및 고령자 취업 지원 등)		
	2. 의료·연금·개호 강화		
	- 고령자 의료지원 강화, 연금기록체제 정비 등		
	- 간병서비스 강화(인력 확보 및 고용관리 개선)		
	3. 육아·교육 지원		
- 「어린이 교부금」 창설 및 학교 급식 지원 등			

목표	주요내용	재정 지출	사업 규모
지속가능사회로의 변혁 가속	4. 저탄소사회 실현	0.9	1.9
	- 신에너지 기술 도입 및 개발 촉진 (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지원 등)		
	- 국제협력 강화 (자원외교 강화, 원유시장 투명성 향상 등)		
	5. 주거환경 및 방재대책 개선		
	- 주거환경 개선 (공립학교의 시설 약 1만동을 내진화 등)		
	- 각종 방재대책 (재난복구, 방재 및 소방 대책 강화)		
	6. 강한 농림수산업 창출		
-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(농림수산업 공급력 강화 및 새로운 시장 창출 등)			
성장력 강화	7. 중소기업 지원	0.4	9.1
	- 영세기업 지원 및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력 강화 (자금융통대책 확충, 하청업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)		
	8. 지방자치단체 지원		
	- 지자체 세수가 감소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		
합 계(지방 0.1조엔 포함)		1.8	11.5
(재정투융자 추가분 0.2조엔 포함)		2.0	11.7
정액감세	-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08년에 한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의 정액 감세를 실시 - 노령복지연금의 수급자에게 급부금 지급을 검토		

자료: 내각부, 「安心實現のための緊急総合対策」, 經濟對策閣僚會議, 2008. 8. 29.

2) 1차 추경예산안 편성(2008.9.29)

- 「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」 이행을 위하여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 감세를 포함하는 1.8조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2008년 10월 16일 확정하였음

<표 III- 11> (1차 추경예산)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

(단위: 조엔)

분야	주요내용	세출규모
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 비용	생활자의 불안요소 해소	0.35
	주거 및 방재대책	0.73
	저탄소사회 실현 및 농림수산업 지원	0.19
	중소기업 지원	0.45
	지방공공단체 지원	0.09
합 계		1.8

3) 추가 경기부양책으로서 「생활대책」 수립(2008.10.30)

-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총 26.9조원 규모(당초 재정지출 5조원 포함)의 「생활대책」을 발표
 - 동 대책은 서민생활안정, 금융 및 경제안정화,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3가지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가지 세부 대책을 마련

<표 III-12> 「생활대책」 주요내용

(단위: 조엔)

목표	주요내용	재정 지출	사업 규모
서민생활안정	1. 가계긴급지원 - 「정액급부금」의 실시(1명당 1.2만엔, 65세 이상 및 18세 이하 0.8만엔 가산) 등	2.0	2.0
	2. 고용안전망 강화 - 시간제근로자(25~39세)의 적극적 고용지원 강화(1명당 100만엔(대기업 50만엔)의 특별장려금) - 고용보험료 대폭 인하(표준세대로 연 2만엔 환급) - 2,500억엔 규모의 「향토 고용 재생 특별교부금」의 창설(10만명 규모의 고용 창출효과) 등	0.3	0.3
	3. 가계생활지원 - 개호보수 변경(+3%) 등에 의한 종사자 처우 개선 - 「안심 어린이 기금(가칭)」의 창설(1,000억엔)(탁아소의 긴급 정비, 어린이집의 확충 등) - 「육아지원 특별수당(가칭)」의 지급 등(둘째 유아부터 연간 3.6만엔 지급 등)	0.5	0.7
금융 및 경제안정화	4. 금융 및 자본시장 안정 - 자사지 매입규제 완화, 공매 규제 강화,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일부 탄력화 등	-	-
	5. 중소 및 소규모 기업 지원 - 21조엔의 자금융통대책 추가(긴급보증 및 정부계 금융기관 등에 의한 대부, 1차 추정예산에 의한 9조원 추가 등)	0.6	21.8
	6. 경제잠제력 강화 - 에너지 절약·대체 에너지 대책의 추진, 자원외교 강화, 연구개발·이노베이션 촉진 등	0.1	0.1
지방의 저력 발휘	7. 지역활성화 - 고속도로 요금의 대폭 인하(대도시권 제외, 토·일·축제일 원칙으로 1,000엔을 상한, 평일 30%할인 등)	0.8	1.0
	8. 주택투자·방재 강화 - 학교 및 주택의 내진화, 용적률 완화 등	0.2	0.4
	9. 지방 공공단체 지원 - 지방 인프라 정비 등을 위한 교부금(6,000억엔) 등	0.6	0.6
	합 계	5.0	26.9 ¹⁾

주: 1) 21조엔의 자금융통대책을 제외하면 6조엔 정도임

자료: 내각부, 「生活對策」, 經濟對策閣僚會議, 2008. 10. 30.

□ 「생활대책」의 세부내용

① 중산·서민층에 대한 생활대책

- 주택대출 감세 관련
 - 과거 공제가능액의 최대급으로 주택대출 감세
 - 에너지절약빌딩 건설에 용적률 완화
- 전기·가스요금의 인상폭 압축 및 평준화 요청

② 중소기업의 기업활력 향상 및 금융대책

- 총액 30조엔에 달하는 자금유통대책 마련
 - 긴급신용보증 : 6조엔 → 20조엔으로 확대
 - 정부계금융긴급대출 : 3조엔 → 10조엔으로 확대
- 성장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
 - 신에너지·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해 즉시 전액 상환
 -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검토
 - 해외소득(17조엔) 국내에의 환류 촉진
- 금융기관의 자본참가범위(현행 2조엔)의 확대
- 주식배당 등에 대해 경감세율을 연장

③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

- 도로특정재원의 1조엔을 지방에 지원
 - 「지역활성화교부금」으로 지방의 인프라 정비

④ 재원 및 재정의 중기 프로그램

-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특별회계 적립금 등으로 활용
- 중기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

- 경기회복 여건을 고려해 감세 등은 3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실시
- 경제 상황 호전 후에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을 개시하고 2010년대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할 방침

4) 세제 개편안 발표(2008.12.19)

- 일본정부는 자민당의 2009년도 세제개정안(2008.12.12. 발표)을 토대로 소비지출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어 대규모 감세정책의 세부 내용을 마련
 - 여기에는 지난해 8월과 10월 금융위기 대응책으로 발표된 내용까지 포함되었으며 국회 통과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
 - 소비 확대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조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방안도 포함
 - 구체적으로는 주택자금 대출 관련 세액 공제한도 확대, 저공해 차량의 취득세 등 경감,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당 및 양도소득세 경감,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및 적자시 법인세의 일부 환급 등이 주요내용

① 소비 확대를 위한 감세

- 2009~11년중 신규주택 입주시 소요된 자금대출에 대해 세액공제, 에너지 절약 및 장애인 시설 개보수 비용 세액공제
 - 가계의 주택구입 부담 경감 및 주택투자의 확대를 도모
- 저공해, 친환경 차량에 대해 관련 세액감면, 하이브리드, 연료전지 및 전기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및 검사시 중량세 3년간 면제
-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당 및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경감세율의 적용기간 연장 (2009년 3월말 → 2011년 12월말) 및 이후 동 소득 비과세를 위한 특별계좌 도입 검토

②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감세

- 일정소득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향후 2년간 법인세 추가 경감(22%→18%), 적자발생시 법인세 환급대상의 확대
- 비상장기업의 경영승계 상속의 경우 상속세액의 일부 납부 유예
- 장기 보유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사업용 부동산 구입시 양도차익의 20%만 수익으로 압축기장 가능한 기한 연장(2008년말 → 2011년말)

③ 기타 성장력 강화 등을 위한 감세

- 성장력 강화, 에너지 절약 또는 신에너지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 즉시 상각제도 도입
- 태양광 발전장치,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시 해당금액 전액 손금 인정
- 해외자회사가 송금하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
→ 해외 수익 자금의 국내 환류를 적극적으로 유도

<표 III-13> 2009년도 세제개정(안)의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내용
주택 구입 및 개보수 촉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자금대출 세액 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0년간, 장기우량주택 600만엔, 일반주택 500만엔 한도 · 소득세에서 차감되지 못한 부분은 주민세에서도 공제 - 장기우량주택의 투자형 감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기우량주택 신축시 일반주택에 비해 추가된 건축비용(최대 1천만엔)의 10% 상당분을 소득세에서 차감 - 개보수 촉진용 감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에너지절약이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보수 공사비의 10%를 세액공제
친환경 자동차 구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차구입시의 비용절감(중량세는 차검사시에도 적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하이브리드차, 전기자동차, 연료전지차는 취득세 및 중량세를 3년간 전액 면제 · 기타 저공해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연비 등의 성능에 따라 세액의 75% 또는 50%를 경감
주식투자 유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권우대세제 적용기한의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인투자자의 주식 배당 및 순양도소득에 대한 경감세율 10%(원칙 20%)의 적용기한(2009년 3월말)을 2011년 12월말까지 연장 - 소액투자 촉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12년 이후 연간 100만엔 한도로 최장 5년간 총 500만엔 한도의 '특별 비과세 계좌' 도입 검토
중소기업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세 경감세율의 추가인하(2009년 4월 1일부터 2년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인세 경감세율 22%(법정 30%)에서 18%로 4%p 추가 인하 - 적자조정 환급제도의 범위 확대와 조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적자발생 중소기업에 과거 납부한 법인세를 일부 환급하는 적자조정 환급대상 기업에 대기업 자회사도 포함하고 설립 후 5년 이내 조건도 폐지 - 비상장 중소기업 경영인이 회사주식을 상속시켰을 경우 경영승계 상속인의 상속주식(의결권의 2/3까지) 과세액의 80%를 유예 - 사업용부동산 취득을 위한 부동산양도차익의 압축 기장 기한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기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의 80%를 압축하여 20%금액만 기장을 인정하는 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08년말에서 2011년말까지 적용
기타 성장력 강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장력 강화나 에너지 절약설비 투자시 투자 전액 상각 허용 - 태양광발전장치,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시 전액 손금 인정 -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을 본사 익금에 불산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 수익금의 국내 환류 촉진을 유도

자료: 재무성, 「平成21年度税制改正の大綱」, 2008. 12. 19.

5)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「생활방위를 위한 긴급대책」 발표(2008.12.19)

- 세계 경제불황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총 37조엔 규모(「생활대책」 이행 6조엔 제외)의 「생활방위를 위한 긴급대책」을 발표
 - 동 대책은 재정 및 금융상의 대응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6가지 대책을 마련

<표 III-14> 「생활방위를 위한 긴급대책」 주요내용

(단위:조엔)

항 목	규모
I. 재정상의 대응	10
1. 고용대책	1.1
2. 고용창출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증액	1
3. 경제긴급대응예비비 신설	1
4. 세제개정(감세조치)	1.1
5. 「생활대책」의 실현	6 ¹⁾
II. 금융상의 대응	33
6. 금융시장·자금조달대책	33
- 금융기능강화법에 근거하는 정부의 자본 참가범위 확대	10
- 은행 등 보유주식 취득 기구의 활용·강화	20
- 정책 금융의 「위기 대응 업무」 발동·확충	3
- 주택·부동산 시장 대책	0.2

주: 1) 「생활대책」에 있어서의 21조엔 규모의 긴급 보증과 정부계 금융기관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
 자료: 내각부, 「生活防衛のための緊急!對策」, 經濟對策閣僚會議, 2008. 12. 19.

6) 2차 추경예산안 편성(2008.12.19)

- 「생활대책」 및 「생활방위를 위한 긴급대책」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총당 및 의무적 경비의 추가 등을 감안하여 4.7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후 2009년 1월 27일 확정하였음

<표 III- 15 (2차 추경예산)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

(단위: 조엔)

분야	주요내용	세출규모
생활대책 및 생활방위를 위한 긴급대책관련 비용	가계긴급지원대책	0.03
	생활안심 확보 등 대책	0.52
	중소기업 지원	0.51
	지역 활성화	0.75
	주택투자 및 방재대책 강화	0.24
	지방공공단체 지원	0.6
합계		4.7

7) 경기대책 위주의 2009년도 예산정부안 결정(2008.12.24)

- 경기대응 관점에서 FY2009년 예산의 주요 내용은 크게 국민생활 방위 및 일본 경제 수호로 구분

○ 국민생활 방위

구 분	항 목	예산액 및 증감
고용대책	고용보험료 0.2% 인하	6,400억엔
	실업급여 적용범위 확대	1,700억엔
	이직자를 위한 주택 및 생활지원	252억엔(신규)
	중소기업 등 고용유지지원	581억엔(+570억엔)
	비정규노동자 등 지원	94억엔(+121%)
	지방교부세 증액	1조엔 (특별회계 0.5조엔)
의료대책	의료진 확보 및 구급 의료대책	428억엔(+79%)
	육아일시금 증액에 따른 출산지원	79억엔(신규)
생활안전	방재대책 추진	2,910억엔(+13%)
	소비자행정 강화	93.3억엔(신규)

○ 일본경제 수호

구 분	항 목	예산액 및 증감
지방 활성화	지방교부세 증액	1조엔 (특별회계 0.5조엔)
	지방 자립을 위한 교부금 창설	9,400억엔(신규)
	식료품 자급력 향상	634억엔(신규)
	지방경제 활성화 사업 후원	37.5억엔(+50%)
	개발낙후지역 통신망 정비	78.7억엔(+27%)
성장력 강화	기초 및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	2,187억엔(+2%)
	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	705억엔(+4%)
	퇴직 인재활용 지원	58억엔(+100%)
	혁신창조기구 창설	400억엔(신규)
	GIS 크레딧의 구입 촉진	433억엔(+40%)
	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지원	789억엔(+25%)
	농·상·공업간 협력 지원	242억엔(+88%)
안전망 구축	경제긴급 대응 예비비	1조엔(신규)
	중소기업 자금지원	674억엔(+34%)
	중견 및 대기업 자금지원	103억엔(+100억엔)
	금융기능강화법에 의한 정부자본 참여 확대	10조엔
	은행 등 보유 주식취득의 활용 강화	20조엔

나. 2009년

1) 민간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발표(2009.1.27)

- 세계적인 금융·경제위기에 따른 불황의 영향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민간기업 금융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1.5조엔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
 - 보유주식의 가격 하락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로 민간은행의 대출 축소 및 자금회수 증대
 - 기업매수 펀드나 정부계 펀드도 운영실적 악화로 투자에 신중

- 지원대상 및 절차
 -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도산하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
 - 지원 대상은 자금조달 곤란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우수한 기술력이 있거나 고용 흡수력이 큰 기업 등
 - 지원 절차는 기업이 정책투자은행이나 민간은행(국가지정)에 지원한 후 은행이 정부(경산성)와 출자 여부를 심사하여 자본투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기업의 우선주를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출자
 - 출자는 정부계 금융기관인 日本政策金融公庫가 보증하며 출자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동 금융기관을 통해 50~80% 수준으로 보전할 방침

- 향후 추진계획 및 규모
 - 2009년 3월말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나 2010년 3월까지 한시적인 조치가 될 계획
 - 손실 보증규모는 대략 1.5조엔 규모가 될 예정이며 출자규모는 최대 수천억엔 정도로 예상

3) '20조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 편성 착수' 보도(2009.2.26)

- 일본 정부와 여당은 빠르면 이달 내로 약 20조엔(310조원)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 편성에 본격 착수(마이니치 신문 2.26일자)

- 추가 경기대책 마련의 원인
 - 급격한 경기 악화와 주가 하락 사태의 재발에 대응
 -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이 제1차 오일쇼크 이래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
 - 24일 도쿄증시에서 니케이 지수가 버블경제 붕괴 후 최저치를 하회하는 등 주가 재폭락 우려가 증폭
 - 미-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수 확대를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요청도 감안

- 경기부양 내용
 - 고용대책과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추가 부양안은 사업규모 약 20조엔이며 6조엔에서 8조엔 정도의 재정지출을 상정
 - 세부내용
 - 학교과 병원 등 공공시설 전반의 내진화, 공항과 항만 정비 등 복수 연도에 걸친 공공사업을 2009년도로 대거 앞당기는 것을 골자
 - 신간선 정비 공사 촉진과 광케이블 부설 확대, 태양 발전과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과 개발 등 일본판 '그린 뉴딜 정책'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
 - 고용대책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주장을 근거로 실업보험의 급부기한이 다된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생활자금을 원조하는 제도 고려
 - 재원조달관련 고려
 - 특별회계의 적립금을 쓰고 건설국채 발행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일

시적인 조치로서 적자국채 증발도 고려

□ 향후 일정

- 여당은 2009년도 예산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뒤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 4월 재원이 뒷받침된 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계획

4) 「생활대책」에 따른 2조엔 규모의 정액급부금 지급 결정(2009. 3. 5)

□ 2008년 2차 경기대책인 「생활대책」 중 가계긴급지원 내용에 따른 정액급부금 지급이 결정

-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의 생활을 지원과 더불어 폭 넓은 급부로 지역의 경기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

□ 정액급부금 지급관련 세부 내용

- 급부대상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
 - 외국인등록증 원표에 등록되어 있는 자(불법 및 단기체류자 제외)
- 수급자는 급부대상자의 범위에 드는 세대의 세대주(외국인의 경우 급부대상자)
- 급부액은 급부대상자 1인당 12,000엔(단, 기준일로부터 65세 이상 및 18세 이하의 경우 8,000엔이 추가로 지급)

※ 3차례 경기부양대책별 이행현황 및 FY2009년 예산반영 상황은 다음 페이지의 표 참조